

인터넷 윤리 포럼

인터넷윤리포럼"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 윤리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KT 문화재단'의 후원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포럼은 제1회 포럼으로서, 포럼 5회와 전문가좌담회 5회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제1회 포럼 내용이다.

지상중계

- 일 자 : 2005년 11월 23일
- 장 소 : 서울팔레스호텔
- 사 회 : 박정호 선문대학교 교수
- 참석자 :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김근태 한국콘텐츠산업협회 공동회장, 변재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송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범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정태원 KT 문화재단 이사장



포럼 요약

인터넷 윤리 정착 및 확산 방안으로는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포털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등이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얻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인터넷윤리진흥부담금'의 제도화 함께, 인터넷 역기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에 인터넷 문화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IT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사회 곳곳에서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일 매스컴을 통해 이러한 보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 위원장 : 윤리 문제에 있어서 온라인만의 윤리수준이 별도로 존재한다기보다 오프라인에서의 윤리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가라앉아 있던 침천물들이



이 휘저으면 다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추악한 모습들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김근태 공동회장 : 인터넷 윤리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 세계를 넘나드는 개방성에서 기

인하는 부분에서 기인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예절이나 윤리적 측면이 많이 와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윤리 운동의 진행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요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주관 및 자체 판단 능력이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우려하는 정도보다는 체득을 통한 교육으로 인해 윤리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의원 : 먼저 인터넷 윤리의 범위를 보면 정보 문화, 온라인 상의 불법행위까지 포함되는데 너무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윤리문제보다



온라인에서 윤리문제를 신경써야 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방성, 익명성, 확산성 등 인터넷의 특성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피해는 법적 처벌은 가능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온라인 상의 윤리문제가 오프라인 상의 윤리문제를 바꿔 버리기도 하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특히 온라인 상의 윤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도 인터넷 윤리 범주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포함된다면 오프라인 상의 범죄에 비해 처벌이 어려운 인터넷 범죄에 대한 기술적 부분 또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관호 원장 : 온라인 상의 윤리문제는 그 확산성과 파급효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몇 사람만 알고 있던 내용이 요즘에는 순식간에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

로 인해 파급되는 효과는 그야말로 “딥 임팩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하며 이에 인터넷 윤리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윤리문제가 대두되는 또 한가지 이유는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된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이제 불과 7년 정도 된 거죠. 인체에 비유한다면 뼈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 뼈에 살이 제대로 붙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 및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각종 표지판, 신호체계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의 윤리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범 회장 : 2005년도는 한국정보처리학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윤리 확산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많은 일을 한 것에 대해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77개 대학에서 인터넷 윤리 교양과목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인터넷 윤리문제에 대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나쁜지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인증제도 등을 통해 무엇이 윤리에 반하는 행동인지,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얼마만한 파괴력으로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태원 이사장 : 우리가 매년 주제를 정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 윤리적 행동, 범죄 등의 부정적 현상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는

일반 범죄가 날로 지능화됨으로써 범죄수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우리는 정보통신 발전과 더불어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역기능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성숙되지 못한 온라인 문화가 원인일 텐데요. 이는 시민 윤리 의식과 연계되어 원천적인 윤리 교육 강화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러한 포럼이 계기가 되어 어떻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통합된 교육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 국내의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 정착및 확산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태원 이사장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단계적인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의 주체도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다시 동급생에게 가르치는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기관이 분담해서 역할을 수행 하더라도 어떤 통합적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범 회장 : 정태원 이사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교재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의 프로젝트 수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기

금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교통 유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털사업자나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윤리 진흥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올해 인터넷 윤리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청소년 및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규는 불과 몇 줄로 축약되어 있을 뿐인데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관호 원장 : 온라인 윤리의 문제가 기본적인 시민 의식 및 문화 확산 등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만 이를 교육의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는 매체입니다. 너무 역기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책에 치중하다보면 인터넷이 가지는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역기능은 축소시키고 순기능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인터넷에 세이프존, 실버존, 키즈존 등 청량한 지

역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윤리의 확산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방송매체 등의 캠페인도 필요하고, 가정적으로는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 등의 노력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가 없고, 또한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5년 혹은 그 이후에나 나타날 문제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면 문화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포털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등도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얻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의원 : 먼저 이상범 회장이 말씀하신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윤리문제는 온라인 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은 온라인 상에서도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정보통신 법조항에서 언급한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 불법인 것, 혹은 오프라인에서는 가벼운 범죄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가중처벌되는 것에 대한 조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행위 이전의 윤리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의 윤리문제와 오프라인 상의 윤리문제에 대

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윤리 도덕이란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인데, 온라인 상의 윤리기준이 오프라인 상의 윤리기준에 급격하게 영향을 주게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만 살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윤리 교육에 대한 통합 시스템의 문제는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차원의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사법부, 학교, 사회단체, 사업자 등 대응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마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가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노트북, 퍼스널 단말기, 와이브로 등의 발달에 의해 점점 더 개인화, 은밀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은밀화, 개인화 상태에서의 인터넷 윤리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통신사업자가 광대역 망을 설치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일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정부에서 광대역망 설치를 강요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죠. 따라서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적 불안요소를 만든 데 대한 일방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윤리문제의 학문적인 체계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정보처리학회 내의 정보통윤리진흥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관이 학계에서 인터넷 분야의 학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정보통신부, 교육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때 민간 위탁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지원 위원장 :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접근은 자발성과 강제성 두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성과 강제성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사회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세계에서 좋다는 법은 모두 차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죠. 따라서 자발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윤리 운동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경찰이 없고, 학교가 없고, 종교 기관이 없다고 하면 좋은 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윤리 문제를 개인의 자발성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소한의 규제 및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새로운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필요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술개발에 의한 윤리 문제의 해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금지단어 기능 등은 기술의 개발에 의한 규제의 한 예겠죠. 전문가가 아니라 깊은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필터링 기술, 방화벽에 대한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정보통신부가 너무 상업적인 논리에 빠져서 인터넷 윤리문제에 대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인터넷 윤리 등 인터넷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부분에 대한 투자도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하 기구의 확장 및 통폐합 등에 관련 기관의 정비를 통해 기술적 차단, 법률적 차단, 교육적인 차단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재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대역망 설치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게임 중독에 걸리거나 음란물 중독에 걸리거나 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자기 책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김근태 공동회장 :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 사업자로는 포털, 콘텐츠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사업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 3자의 입장이 다 다르므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타나는 문제는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앞서 인터넷 관련 부담금제도가 언급되었는데 사실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사업자들은 업계에서 양호한 축에 속합니다. 소위 “물을 흐리는” 영세 사업자들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즉, 환경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윤리 확산에 필요한 자금 확보는 사이트 인증제도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신

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해서 사이트 인증제도를 통한 수익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포털사업자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취약한 반면 대단히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포털사업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것인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정보처리학회

박기서 주임(pks@kips.or.kr)